

사회

시교육청 공립교원 특채 교사 바뀌치기 광주 교육계 반응

“도덕성 그렇게 외치더니...” 충격

해당 교사들 “언론 보고 알았다”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사립고 전교조 교사 5명을 공립으로 특채하면서 합격자 1명을 바꾸치기에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역교육계는 하루종일 술렁였다. 교직사회의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교원 부당채용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공립으로 특채된 근무중인 해당 교사들은 “우리로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사전 내정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사들 “전혀 몰랐던 일”=> 지난 3월 공채에서 사립 대공영고에서 공립으로 특채된 교사 5명중 4명(1명은 연락이 닿지않음)은 1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몰랐다.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교육청의 ‘바뀌치기 작업’에 따라 공립에 채용된 인물로 거명된 음악과 A교사는 “채용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 큰 충격이며 황당할 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B교사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으로선 억울하다. 잘못된 사실이 없으니 나중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C교사는 “금지초문이다. 언론 통해서 오를 알았다.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D교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명예 실추 우려=>일선 학교에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 체제의 시교육청이 부패근절을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펴 왔는데 그런 교육청이 정작 교과부 감사에 비리도 조사받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서부교육청의 한 직원은 “수의계약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로 일선 학교 교직원 60여명을 무더기 징계했던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감사대상이 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광주 한 고교 교장은 “도가나” 충격을 털고 광주 교단이 일어선다는 상황에서 공채 파문이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광주교육이 또 다시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교 교직원들에게 공립으로 특채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다. 공립교사가 되면 일정 경력과 연구실적 등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교감, 교장이 될 수 있고 신분상으로도 사립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사립의 경우 소속 학교법인의 관계자의 눈도장을 받지 못하면 정년까지 평교사로 지내야 하고 중요 보직에 오를 길도 매우 좁다. 교감·교장이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또 사립학교에서 정년(만 62세)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학교재단이 노력 교사들의 학생지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탓에 55세를 즈음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게 현실이다. 광주 사립고교의 한 교사는 “사립 교사들에게 공립특채는 절차가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사실상 특혜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남자배구 코치 구속

대학배구연맹 전무시절 공금 1억7000만원 횡령

비리에 연루된 배구협회 간부들이 잇따라 처벌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현 국가대표 남자배구팀 코치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대학배구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하던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대한대학배구연맹 부회장이자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인 이모(48)씨가 협회 등의 공금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한배구협회 심판이 사도 겸하고 있는 이씨는 배구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공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정동채 전 장관 4억 수수 조사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수원지법 평택지원 권운경 판사는 14일 업무들로 부터 급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동채(61)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자금 성격 등으로 보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내부 경선에 나왔을 당시인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내 가로등 교체업자 여러명으로 부터 4억여원의 급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청은 지난달 정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9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스

나원침 (8460) 김종두



수익원 빌려 가로채 60대 해외도피 11년만에 검거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 수익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주한 여성이 11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은 14일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여·67)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999년 9월22일 전주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69)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18차례에 걸쳐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 8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5억1000여만원을 빌려 2000년 5월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임씨는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혀 11년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병문안 갔다 병실서 난투극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자녀를 병문안 중이던 40·60대 모녀와 30·60대 모녀가 머리를 부딪고 난투극을 벌여 난란히 경찰서행.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모(69)·김모(41)씨와 김모(60)·이모(38)씨는 각각 모녀기간으로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께 자녀들이 입원 중인 광주시 광산구 모 아동병원 병실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병실 화장실 문을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추태.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뛰는 양념값 때문에... 김장철 ‘짜퉁’ 판친다

중곡산-국산 고춧가루 혼합 판매 무더기 적발

김장철 양념류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틈을 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김치, 고춧가루 업체와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김장철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3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3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배추김치, 고추, 마늘 수입 및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7825곳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곳은 형사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곳은 과태료(617만원)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값이 크게 오른 국산 고춧가루(1kg당 3만원 선)와 싼 중국산 고춧가루(1kg당 8000원 선)를 혼합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이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곡 산재 고춧가루 제조업체인 A농산은 국내산과 수입산 건 고추를 각각 20~50%로 혼합 가공해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혼합 고춧가루 19.4t을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해 광주·전남 소재 유명 브랜드 김치제조업체와 체인 음식점 등 대량 수요처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나주의 한 고춧가루 제조공장은 이번까지 4차례나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장터와 김치 제조공장에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불법 판매한 물량 400kg과 현장에서 압수한 물량을 분석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농관원의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때는 1588-8112나 품질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온 뚝... “구제역 막아라”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장등동 한 축사에서 북구청 경제정책과 직원과 수의사들이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의원 풍자 ‘집단 모욕죄’ 성립 안된다”

김봉수 전남대교수,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주장

최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예정남’ 개그맨 최효종씨를 상대로 고소했던 ‘집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V 개그프로그램의 한 코너(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내용과 관련, 강 의원이 최씨를 받아 불륜을 만들면서 근로자 임금 8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조선훈·광주대·전남대·호남대와 광주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15일 개최하는 2011년 광주·전남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공동회장 이동명 호남대 교수·강찬우 광주지검 차장검사) 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논문에서 전남대 김봉수 교수가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이라는 집합체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체를 피해자로 보는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익론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집단 명칭을 사용해 그 집단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즉 ‘집단표시에 의한 개별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개그에 사용된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막연히 집단에 대한 표시에 지나지 않고, 풍자 표현이 의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모욕사건’과 관련,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1, 2심에서 승소한 아나운서 모욕죄는 막연히 집단에 대한 표시 수준을 넘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평가와 직결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희종기자 chae@

8800만원 임금 체불

대불산단 악덕업체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14일 밀린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기금인 체당금으로 정리하려 한(근로기

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영암 대불산단 내 오 선박 불륜제조업체 대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9년 12월부터 규모가 더 큰 같은 업종의 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불륜을 만들면서 근로자 임금 8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It features a chef and a woman, with text: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It also lists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and contact information: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